

“전주, 대도약의 중심으로”

진보당 강성희 전 국회의원, 전주시장 출마 선언… 호남 대통합 제시

강성희 전 국회의원(진보당)이 6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전 의원은 “전주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빼앗긴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현 시정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과 함께 전주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강 전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전북과 전주가 그동안 국가 발전 과정에서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이 이제는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호남 대통합’을 제시하며, 전주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호남대통합의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새만금·호남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수도권 집중 구조에 정면으로 대응해 호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주를 거대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주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전주시정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



진보당 강성희 전 국회의원(진보당)이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오는 6월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강성희 전 의원 측 제공>

도 이어졌다. 강 전 의원은 “호연장담했던 예산 폭탄의 결과는 6000억원에 달하는 부채였다”며 “전주전의 버드나무가 베어지듯 생태와 공동체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독단적인 행정 체제를 전면 교체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강 전 의원이 제시한 ‘전주 전성시대’를 위한 5대 비전은 △호남대통합을 통한 용인 반도체 산업의 새만금·호남 이전과 전주에너지공사 설립 △전북형 공공배달앱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전주 고유의 문화·역사 자산을 IP화한 K-컬처 메카 조성 △농민수당 2배 확대와 노동 전담 부서 신설 △임가내 6천억원 부채 해결과 시민 중심 행정 혁신 등이다.

강성희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전주의 주권을 되찾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검찰 독재에는 단호했고 민생에는 헌신해 온 추진력으로 전주의 비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찰칵’... 선물 받은 사오미폰으로 셀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만찬을 마친 뒤 경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선물 받은 사오미폰으로 시 주석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공동취재)>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시행자 확정

공모 통해 서남권원드파워 컨소시엄 선정... 향후 25년간 발전단지 건설·운영 권한 부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해상풍력 산업에서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조성계획의 첫 단계인 확산단지1 고창 0.2GW 해역 사업시행자로 서남권원드파워(주)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해역은 지난해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곳으로, 풍력 발전에 최적화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선정된 서남권원드파워(주)는 템플턴하나자산운용(주)을 대표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컨소시엄에는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외에도 (주)다엔아이코퍼레이션, 그린존한전(주), (주)부강건설, (주)세광중

합기술단,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한전KDN과 중앙해양중공업(주)도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합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 규모로, 사업시행자에게는 향후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인허가 및 건설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며, 이후 2050년 12월까지 20년간 상업 운전이 이뤄진다.

서남권원드파워(주)는 올해부터 발전사업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와 단지배치 설계, 주민보상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이익 환원을 위해 주민참여 비율을 최대치로 확보해 발전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온전하게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향민인프라 조성과 유지보수항 개발, Q&M 장비 및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관련

산업 생태계도 함께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고창 해역 사업을 시작으로 부안해역 등 추가 사업시행자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향후 추가 선정될 부안해역 사업자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사업”이라며 “금번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발전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은 물론 부안해역까지 전북 전체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소통·균형으로 의정활동 뒷받침할 것”

김형우 도의회 사무처장

2026년 새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승진하며 새로운 공직 여정을 시작한 김형우 전 전북도청 건설교통국장을 만났다.

1997년 4월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군산시에서의 현장 행정부터 전북도 핵심 SOC 정책을 이끌어온 기술 행정 전문가다.

김 사무처장은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며 “올해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마지막 소임을 도의회에서 맡게 돼 책임감이 더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1987년 전북 입실 오수 출신으로 오수중학교와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지방고시 토목직으로 공직에 입문해 군산시 상수도·하수도 분야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며 현장 행정의 기초를 다졌다.

특히 군산시 수도과장 재직 시절은 그의 공직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간으로 꼽힌다. 당시 군산시



상수도 유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직원들과의 의기투합으로 2년 만에 유수율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막대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였다”며 “성과가 눈에 보이는 현장 행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으로 전입한 이후에는 새만금 개발 업무, 군산경제자유구역청, 안전정책관, 정보화총괄과장, 도로교통과장, 입실 부군수, 건설교통국장, 정읍 부시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건설교통국장 정보로 전북 SOC 정책의 한 축을 담당했다.

김 사무처장은 건설교통국장 시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법 제정과 개정은 국회의 역할이 크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적 뒷받침 역시 중요하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전북의

교통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취소 소송 패소로 어려움이 있지만 도가 집행경지와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착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의 무대는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다. 김형우 사무처장은 치밀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말 한마디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속 깊은 공무원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직원 상하 간에 신망이 깊다.

사무처장 책상 위에 업무 매뉴얼과 법령집을 수북이 쌓아두고 의회 운영 전반을 공부하며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성실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는 “도의회는 집행부와 도민을 잇는 중요한 축”이라며 “사무처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만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시민교육 넘어 민주 공화 시민교육으로”

전호성 전주교대 교수 “자유 지켜낼 줄 아는 시민 길러야”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전주교육대학교 전호성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기존 민주시민교육을 넘어 공동체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민주 공화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학교 시민교육은 개인의 권리와 참여에 초점을 둔 민주시민교육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자유를 말할 줄 아는 시민을 넘어, 자유를 지켜낼 줄 아는 공화 시민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때 제1조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민주만 강조되고 공화의 가치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협오와 선통, 가짜뉴스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은 민주주의의 취

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교 교육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전 교수는 학생 자치, 인권 교육, 토론수업 등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책임과 의무, 공공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 역시 단순한 행사 조직이 아닌 예산과 규칙, 책임을 다루는 공적 의사결정의 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 생태 전환교육과 문화 다양성 교육 역시 공공성과 상생을 다루는 민주 공화 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통해 경쟁 중심의 학교 문화를 완화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학생들이 상생과 공존 속에서 자유의 의미를 이해할 때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민주 공화 시민교육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김재훈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25개 지역 신년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전국 25개 지역을 순회하는 대규모 신년 의정보고회에 나선다. 용 의원은 오는 9일부터 2월 4일까지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을 향한 정책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충청, 강원, 부산·경남, 전북, 수도권, 제주까지 이어진다. 곡성·구례·여수·고흥·목포·해남·진도·영주·청주·천안·원주·통영·창원, 안주·군산·순창·남원, 인천·안산·서울·수원, 제주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부장관, 미국 에너지부 장관관과 면담...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기념 행사 참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후 4시(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James D. Danly) 미국 에너지부 장관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망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산칼륨, 리튬플루오르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이번 사업은 우리부의 P5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앞으로 한·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4시(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관과 면담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오후 5시, 현지시간)에 참석해, “한·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

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장관관을 비롯하여 짐 뱅크스(Jim Banks) 인디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등이 함께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민생안정지원금

지금 관련 긴급 회의 열어



남원시의회의(의장 김명태, 사진)가 6일, 시의회 의장단과 최경식 남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동절기 관광객 감소로 지역 상권이 얼어붙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주변 지자체의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상실감과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재정 여건과 지원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4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김명태 의장은 “앞으로도 민생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